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평화경영정책

- 출처 :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 일시 : 2005년 1월 24일
- 연사 : 손학규 경기도지사
- 주최 : 중앙일보,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주제 발표

1. 경기도,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경제의 압축판

제가 일하고 있는 경기도는 한반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성은 과거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는 강원도와 함께 분단이 된 도입니다. 개성공단의 배후 기지로서 경기북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당면 과제입니다. 제2자유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성공단에 환자가 생기고 불이 날 때를 대비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군의 주요 전력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의 대부분도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옮기는 일에도 도의 행정력이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군기지 이전 논의가 나왔을 때, 저는 미군은 전방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전하더라도 전진 배치된 북한의 화력을 다소간이라도 뒤로 물리는 것과 연계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미간에 외교적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미군기지 이전이 기정사실로 된 이후에는 아예 이 기회에 평택을 제대로 된 국제 평화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계를 무대로 뛰었습니다. 지구를 다섯 바퀴나 돌았습니다. 그 결과 저의 취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에 88개사 135억불의 첨단외국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중국, 인도, 동남아 국가들의 급성장 등 '아시아 시대'의 전개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이 글로벌 차원의 경쟁과 협력과 분업 구조 속으로 얽혀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도정 목표를 '세계 속의 경기도'로 정했습니다. 첨단기업 유치 이외에도 영어마을, 교육 지원 사업, 한류우드 등 주요 사업들도 그러한 글로벌 시각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시대, 아시아의 시대라는 관점에서 남북문제도 바라보고 경기도정도 수행해왔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이 10년, 20년 이후에도 평화롭게 먹고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든다는 자세로 일해 왔습니다. 물론 인프라는 전혀 눈요기꺼리가 되지 못하는 인기 없는 종목이기는 합니다만, 저로서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파주 LCD 단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파주 LCD 단지는 제가 강조하는 '평화경영'의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이기도 합니다. 휴전선으로부터 10여 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파주에 LG 필립스가 100억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이면 대량생산이 시작됩니다. 필립스가 대만으로 가려고 한 것을 대한민국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한 겨울에 5천 평의 텐트를 치고 온풍기를 돌려가며 문화재를 발굴하는 등 MOU 체결 2년 만에 50만 평의 LCD 지방산업단지를 완공하는 유례 없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 한반도 평화경영정책의 구상

얼마 전 뉴욕타임즈와 독일의 디 짜이트紙가 보도했듯이, 이제 한반도의 접경지역은 분단과 대결과 낙후의 상징에서 평화와 상생과 첨단 중심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 상황을 지레 걱정하는 외국의 CEO들에게 할 말이 생긴 셈입니다. '파주의 LG필립스를 보라. 두려운 것이 있으면 DMZ 턱 밑에 백억불을 투자했겠는가'라고 설명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나아가, 저는 작년부터 파주의 첨단 산업단지, 주위의 협력단지 및 물류기지와 개성공단을 연계시키는 '통일경제특구'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 광복60주년 기념 세계평화축전을 마치면서 저는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파주-개성 경제특구 제안도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은 종합적이고 자족적인 기능을 갖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원산지규정문제, 전략물자 반출입 문제 등 다양한 국제적 규제도 있습니다. 이런 제약을 극복하면서 남북의 산업적 연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북한 근로자들이 남측 파주 일대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며 직접 일할 수 있게 하고, 공동의 대학을 설립하여 북한의 기술인력, 경영 인력들을 길러내는 등 궁극적으로는 개성과 파주를 하나의 완성된 평화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파주-개성 경제특구 제안의 핵심입니다.

저의 '한반도 평화경영정책'은 이렇듯 남북이 힘을 합쳐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자는 글로벌 경제의 관점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관광교류와 제한된 임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북경협을 긴밀한 산업적 연관구조를 갖는 수준으로 높여보자,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착실하게 구축해가자는 것입니다.

'평화경영정책'의 세부 과제 중에는 북한 농업 현대화 합작 사업도 있습니다.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벼농사 합작 시범 사업은 저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여 작년에 평양 주변 3ha 농지에서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개발한 종자와 기술이 두 배 가까운 쌀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른바 '평양-경기미'가 탄생한 것입니다. 올해는 북한측의 제안으로 100ha로 그 재배면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앞으로 벼농사 차원을 넘어 농촌의 한 마을을 전면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합작 사업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평양-경기미를 트랙터로 추수하는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아리랑축전 기간이었고 북측은 방북하면 그 축전을 꼭 관람해야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는 경제협력에 정치적인 것이 끼어 드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의 기획관리실장을 북한에 보내 추수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 진전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파주LCD단지와 벼농사시범사업의 사례처럼, '추상적 평화'를 넘어 '손에 잡히는 평화'(Peace in Hand)를 일구어나가자, 그 일을 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염두에 두자, 실사구시의 자세로 착실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남북협력의 성과를 관리하고 쌓아나가자,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평화경영'의 방향입니다.

그 외에도 '평화경영정책'은, 지금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 이후의 동북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각급 남북회담의 정례화, 군사적 신뢰구축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관련한 국제협력의 문제 등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과 한미 관계

잘 아시다시피, 북한 핵 문제가 본질적인 상황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결과 소위 '9.19 합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간 액션 프로그램의 Sequence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Sequence 문제라기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의도(intention)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확실한 신뢰를 갖게 해주어야 합니다. 핵 프로그램을 뭔가 남겨서 또 다른 카드로 쓰겠다는 미련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핵 동결을 지렛대로 했던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상황이 다르며, 그 수준의 합의로는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은 우리 정부도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에 요구해야 합니다.

대신 미국을 포함한 5자는 핵 폐기 이후의 대북 지원 및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채찍'도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 폐기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고집할 경우, 또 다시 신뢰를 깨뜨렸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인가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적 수단의 범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 내 네오콘의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아예 북한정권을 붕괴시킬 목적을 갖고 대북 정책을 구사하거나 6자회담에 대응하려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효성도 없고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북한 붕괴는 만약의 사태에 대한 위기 관리 차원에서 대비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일부에서는 북한의 조기 붕괴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었습니다. 제네바 합의의 이행에는 10년도 더 걸리는데 그 전에 북한 정권이 붕괴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붕괴하지 않았고, 제네바 합의의 성과를 백지화했을 뿐만 아니라, 핵문제는 더욱 심각해져버렸습니다.

최근 미국 외교 전문가 사이에서도 지적이 나오듯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악의 축, 범죄정권'과 같이 낙인찍기를 반복하는 것은 현명한 외교가 아닙니다. 위조지폐, 인권 등 다른 현안은 그것대로 다루되, 6자회담은 그와 별개로 착실하게 진전시켜가야 합니다.

북한은 핵폐기의 의지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미국은 그에 따른 대응 조치의 패키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 그리고 6자회담 참가국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한미동맹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 중에 많은 부분이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미 양국간 신뢰관계가 흔들리면 미국 내에서 강경 대응의 목소리가 커지고 북미관계에서 불필요한 장애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미 관계에 튼튼한 신뢰가 있다면 한국과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의제적 역할 분담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간 신뢰는 전술적 유연성을 높이지만 불신은 전술적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한국의 능동적 역할과 그 공간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현 정부 외교 및 대북 정책 담당자들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과정으로서의 통일', 정치적 접근은 경계해야

여기서 통일에 대한 시각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통일은 법적·제도적 통일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통일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바탕 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세계적 환경과 동북아의 정치 경제적 지형, 그리고 한국 사회의 발전 및 남북관계의 진전 단계에 맞추어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자체가 통일의 과정이자 각 시점에서의 통일의 모습인 것입니다.

2004년 12월 저는 남북경협이 살아있는 현장인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습니다. 한때 북한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에 한국 기업의 이름이 선명한 공장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하여 생산된 제품이 서울 한복판에서 팔리는 모습이야말로 2004년 12월 현재 상태로 남북이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수백~수천 개의 공장이 들어서고 남과 북의 사람과 물자가 뒤섞여서 북적댈 때 우리의 통일 수준은 그만큼 높아질 것입니다.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장 제도적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정치적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정부도 가까운 장래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낮은 단계의 연방 혹은 국가연합'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는 일부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승능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국내정치를 고려한 전략적 통일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남남갈등 등 분열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남북관계의 실사구시적 전진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각급 남북회담 하나라도 정례화하고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정적이고 우호적인 국제 환경의 조성, 남북간의 실제적 통합 수준의 제고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평화를 착실하게 업그레이드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일을 과정으로 인식할 때만 분단 체제 관리론이나 맹목적 통일 지상주의의 잘못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통일의 초석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약간 설명 드린 바 있는 저의 '한반도 평화경영정책'구상은 바로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관점 위에 서 있습니다. 북한을 고립에서 탈피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내자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세계화', '세계 속의 한반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평화경영'이란 한반도 평화의 콘텐츠와 인프라를 실사구시적으로 업그레이드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안정적이며 전면적인 수준까지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시각에서 남북경제협력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의 역할까지 적극 고려하는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남북 간의 좁은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의 변화를 시야에 넣고 동북아의 상생발전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하며 추진해나가는 것입니다.

5. 동북아시아의 평화경영

21세기 한국이 다루어야 할 외교 전략적 과제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습니다. 우선 테러,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국제범죄 등 글로벌 이슈들이 있습니다. WTO시대의 대응과 FTA(자유무역협정)의 확대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의 안정과 민족주의적 갈등 해소 문제, 중국의 급성장 등 동아시아 경제 이슈, 자원경쟁과 환경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복합 다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문제를 중심으로 외교 문제를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 국내정치를 고려한 전략적 정책 결정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주냐 친미냐, 혹은 미국이나 중국이나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 역시 탈피해야 합니다. 민족공조나 한미공조나 식의 이분법도 전략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외교에는 자주파나 동맹파가 아니라 오직 실리파만 존재합니다. 한미·한중 관계도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비중을 조정해나면 되는 것이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평화와 지속적인 상생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착실하게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한 '평화경영'의 개념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차원에서의 평화와 상생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과제로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문가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동북아의 경제공동체, 안보협의체 등의 구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도 유럽통합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 역시 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의 체제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2005년 6월 현재 외환보유고 세계 1, 2, 3, 4위(중국 8,379억 달러, 일본 8,340억 달러, 한국 2,067억 달러, 대만 2,532억 달러)가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이 네 국가의 외환보유액을 합하면 무려 2조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아태 국가들 사이에 다양한 경제협력의 틀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도성장 그 자체도 위협이지만, 만약 잘 나가는 중국경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 흔들릴 경우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칠 위험은 대단할 것입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대비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외국의 CEO들을 만나보면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큰 시장이지만 지적재산권 보호나 인적자원의 수준에서 한국에 뒤떨어집니다.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첨단업종분야가 대한민국으로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면 우리는 명실공히 아시아의 경제 허브 중에 하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시아 시대를 대비하는 넓은 안목의 경제 정책, 글로벌 시장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의 확보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의 네트워크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본에 의해 촉발된 한·중·일 간의 민족주의적 갈등 역시 우리에게 긍정적 요소는 아닙니다. 역시 국내 정치적 요소의 과잉 개입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분열의 요소가 가득한 동아시아에는 그만큼 국제 협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함께 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 구상은 상호신뢰와 현실적 평화경영을 바탕으로 진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1세기는 자원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석유 수입 세계 2위(중국), 3위(일본), 7위(한국)가 동아시아에 있습니다. 환경문제와 에너지를 둘러싼 한, 중, 일의 협력도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핵에너지 분야의 안전관리, 핵폐기물의 공동 재처리 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약소국 콤플렉스를 스스로 벗어날 때입니다. 지표에 따라 다릅니다만, 세계 10위~11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UN에서도 11위의 기여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차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경영, 나아가 글로벌 이슈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부터 줄여가야 합니다. 한 쪽은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실사구시적 외교 및 한반도 정책으로 변화해야하며, 다른 한 쪽은 냉전적 발상에서 벗어나 과거 남북기본합의서를 추진했던 자신감과 열린 자세를 회복해야합니다.

아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지금,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한반도'라는 시각 하에 적극적인 평화경영에 나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강재홍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여러 가지로 손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북아 교통 물류 인프라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평화란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전쟁과 전쟁 사이의 짧은 기간을 말한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한반도 평화경영, 그리고 세계 속의 한반도 경제 관련 내용들이 얼핏 보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주창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 정책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독창적인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이 통일의 과정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통일은 곧 과정이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상당히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만 좀 더 보태졌으면 하는 것들이 미래 예측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적합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좀 더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발표문을 듣고 느낀 제 소견입니다.

손 지사님께서서는 경제 협력 가운데 대북 경제 협력 기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개성 파주를 연결하는 남북 경제특구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의 경제협작을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가 갖는 상대적인 경쟁력은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호 협력에 지속성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돈의 떡도 싸고 맛있어야 한다. 또는 할아버지 떡도 싸고 맛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여기에서 강조한 부분이 이데올로기가 평화를 주도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남북간의 경제 협작이 갖는 상대적인 경쟁력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북쪽 사람들이 ‘우리끼리’ 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끼리’라는 말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들이 하나의 사상을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 새로운 단어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과연 명분만으로 남북 경제 협력이 또는 경제 협작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한반도 평화경영정책의 10대 과제로 남북 대화의 의제 개방과 남북간 대화의 제도화 등 여러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속에 한반도 경제에 대해서 보면, 이미 남북간에 도로와 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려하는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이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컴퓨터가 개성공단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략물자 반출제한규정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미국에 대한 우리의 설득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국무성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핵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무성의 디트라니 당시 북한 핵 담당 특별대사가 북한의 핵 문제가 타결된 이후에 미국이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레짐작으로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말고, 정말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좀 더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손 지사님께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남북 교통망이 연결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범 철도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시범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남북간의 철도 협력 회의 또는 남북의 철도 전문가 회의를 하도록 최근에 부산 APEC 회의에서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최근까지 동해선을 계속 고집해 왔었는데 그러한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이든 동해선이든 어느 쪽이든 관계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투자 자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경의선의 개성~신의주 구간이 약 411km인데, 어렵 짐작으로 저희가 일단 국제선 열차로의 활용 가능성을 얘기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는 약 2조 5천억~6조 9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계산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시겠지만 단선과 복선의 차이를 놓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과거의 동북아 개발은행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중국의 천진이 중심이 되어서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하자라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손 지사님은 동북아 여러 나라들의 외환 보유고가 2조 달러라고 하셨는데 외환 보유고 2조 달러를 활용한 지역개발은행의 설치가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러시아 유전이나 또는

중국의 동북3성의 개발, 몽골 등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 관심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경기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바다를 빼고 또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택항의 역할, 또 평택항과 인천의 연결, 그리고 황해권의 對중국 해상 물류 등과의 연결이 하나의 축이 되고, 또 하나는 경의선 철로가 또 하나의 축이 되는 이러한 남북간의 연결 또는 교류·협력의 틀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새로운 아이디어와 상상력,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들로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하는 저의 희망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동북아의 교통·물류 등 저의 관심 분야만을 너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부분을 뺀 대통령의 국정 연설과 비슷한, 상당한 정치적인 철학이 담긴 하나의 포괄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어의 질문은 국내 문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또 저희 중앙일보의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은 간략히 두 분의 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준 연세대학교 교수) 손 지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안인데 저는 칼럼에서 쓴 적이 있는데 납북자와 국군 포로는 귀환, 송환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북한의 사회적인 체제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는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북핵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그리고 남북 관계가 제대로 제도화 과정에 이르면서 그때 얼마든지 본격적으로 제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손 지사님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 오늘 지사님의 말씀 내용 중에 정말 반가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철도·도로 등에 너무 빠져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10년 전부터 임가공 사업가나 많은 기업인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엘리트층을 많이 변화 시켰는데,

오늘 지사님께서 처음으로 산업화를 해야 된다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남북 교류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나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업화가 되지 않고는 북한과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구나 노동집약적인 사양산업 쪽에서 보면 많은 유희설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놓고 있습니다. 그런 설비를 북쪽에 보내어 북측 인력과 함께 산업화시킨다면 남쪽도 공동 이익을 창출하고 기업이 되살아 날 수도 있고, 북쪽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난번의 벼농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마침 작년 6월에 저도 그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북한 농업 안내를 받아서 간 적이 있는데 모를 좀 늦게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좋은 수확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실행된 것이 작년말로 약 4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평양의 중심부에 가 보면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중국은 1년에 20억 달러 가까운 경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자원이나 유통 분야가 거의 다 중국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액수지만 크게 기여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학규 지사) 김정태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변 드릴 일이 아니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측에서 벼농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작년에 3ha, 금년에는 10ha, 내년에 20ha로 연차적으로 늘려가서 5년차에 가서 100ha로 늘릴 계획을 협의했는데, 첫해에 성과가 좋으니까 바로 금년에 100ha로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영농 시범사업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벌여, 마을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것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벼농사 같은 것은 경기도에서 몇 년 동안 북한 토양에 맞는 법씨를 개발했습니다. 작년에 협의가 늦어져서 잘못하지 않을까 했는데 해 보자고 했었던 게 좋은 수확을 거둔 것 같습니다. 북한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남쪽에서 한 시범 사업이 자기네보다 두 배가 수확량이 많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놀라면서 이걸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벌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단순한 인도적인 지원, 일시적인 퍼주기 지원이 아니라 경제와 특히 농업에 기초를 튼튼히 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에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김우준 교수님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떤 자리에 갔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처음에 오늘 강연을 하는 데 질문이 나오기는 나을텐데 인권 문제에 대한 답변 질문만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질문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북한 인권 문제가 그만큼 미묘한(delicate) 문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단순화시키면 북한 인권 문제를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가 왕왕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었고 논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이분법적인 구도의 한 산물인데, 저 자신이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 인권 운동에 온 몸을 바쳤던 사람으로서 인권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이룰테면 미국의 NGO 단체에서 하는 그러한 인권 문제 제기를 한국 정부에게 똑같은 차원에서 대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의 북한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수준과 방법, 한국 정부의 그것, 미국의 인권 단체, 또는 한국의 인권 단체 그것이 각각 다르고 그것이 전문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오늘 손 지사님의 매우 유익한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국내 평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요소의 양극화 현상이 국내 평화를 저해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일부에서는 국방비를 2분의 1 정도로 대폭 삭감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이것이 가장 유일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손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간단하게 3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 지사님께서 통일 문제, 동북아의 미래를 열어

가는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한류 얘기도 많이 나오는 데 문화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끝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외세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현 정부의 자주파·동맹파의 이분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이들의 자주적인 분위기,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외세, 그것이 한미 동맹이 됐든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평화체제 구축을 해 나갈 것인가 아이디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손학규 지사) 우선 김용호 교수님의 양극화와 국방비 감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극화의 문제를 사회적인 대립, 이념적인 갈등 쪽으로 자꾸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극화 문제의 본질은 새로운 빈곤층의 증가에 있다고 하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많이 생겨도 양극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문제를 제로섬 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걸 잘라서 나누어주자 이런 식의 발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생산을 늘리고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접근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국방비 감축을 통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 발상부터가 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문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이 첫번째 답변입니다.

두번째는 국방비 감축 문제가 과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방 현대화 계획은 15~20년이 걸리고 그 뒤에 국방 인력을 50만 명 정도로 감축한다는 등의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 현대화 그 자체가 상당한 재원을, 제가 기억하기로만 약 600조 원을 상정하고 있는데 국방 현대화 계획과 국방비 감축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방 현대화 계획을 포기하고, 그리고 군사 인력 감축을 비롯한 국방비 감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며,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라라는 생각입니다.

제성호 교수님께서 간단한 질문을 해 주셨지만 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다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다분히 이분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다, 저는 평화·번영 정책과 평화경영정책의 개념을 약간 달리 합니다. 평화·번영 정책은 '평화+번영'이 될 것이며, 평화경영정책은 지금 평화체제를 어떻게 매니저 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또 한반도의 남북 경제가 협력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글로벌 경영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좀 더 글로벌한 시각에서 남북 문제와 평화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도 나오지만 한미 동맹이나 민족 공조나 그런 것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며, 대미 관계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같이 형성해서 한반도의 문제, 남북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통한 남북의 경제적인 상생 협력, 그것이 한반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김정태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희설비든지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남북간의 상호 윈-윈(win-win)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글로벌한 시각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접근에 대해서 솔직히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경영정책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문화적인 기초가 상당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류를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거나 몇몇 개인 스타들의 그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저력의 발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남북간의 문화적인 교류와 협력은 평화경영 차원에서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개념이라고 봅니다.

(길정우 이사) 오늘 아침에 포럼을 취재하러 오신 여러 기자 분들이 계시는데 기자 분들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명봉 국민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구상 중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과정으로서의 통일 개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법적·제도적인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 설정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제2항에 기초한 구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이 통일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일방안이 아니고 통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했고,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한다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로서의 통일보다는 과정의 통일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국가 통일 내지 제도 통일보다는 사실상의 통일을 강조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통일보다는 민족 통일을 우선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통성에 대한, 물론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것도 공통적인 개념 요소로 포함이 됩니다. 그것과 손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의 맥이 서로 닿아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정, 통일방안이 아니고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써의 남북연합, 그걸 국가연합이라고 하던 남북연합이라고 하던 남북연합은 어차피 통일에 이르는, 어찌 보면 거쳐야 될 과정, 그 면에서는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개념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 정부의 통일 방안은 공통분모로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된다. 즉, 단계적·점진적 단계를 필히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 나온 것이 남북연합이라는 공통 분모를 도출되었습니다. 그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이미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천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북간의 통일방안이 아니고 통일 과정에 대한 합의, 즉 손 지사님이 강조하시는 과정으로서의 통일, 사실상의 통일에 대한 합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은 구체적으로는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라든가 이산가족의 만남 제도와 면회 상설이라든가 또 손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의 통일경제특구 설정 등이 구체적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인호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우리가 남북 문제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는 바로 기초 인식의 통일이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어 기반이 안 깔리고 자꾸 논쟁을 하다 보니까 생산적이지 못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손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남북 문제는 국제 문제다, 즉 바이-래터럴(bilateral)한 남북 양자간의 국제 문제이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 안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주 적절한 인식이고 그러한 인식을 가진 데에 대해서 존경을 표시합니다.

이런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야 하는데, 그 다음으로. 제가 보기에 국정 새로운 부분은 우선 우리나라의 세 가지 인식의 통일을 못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북한의 실상에 관한 인식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과연 어떠한, 북한의 인권이 과연 어떠한, 북한의 종교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그렇게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서 전략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팩트(fact)는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남쪽에서 북한 경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북한이 국민소득을 발표하지 않은 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통일부 같은 곳에서도 북한의 국민소득이 약 800~900 달러로 발표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임동원씨와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총리급 회담에 참여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북한 경제가 대충 어떻습니까? 소득 수준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분은 300 달러 내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저는 그 분의 분석이 아주 정확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임동원씨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을 극히 나쁘게 이야기 할 사람이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지나치게 친북 쪽이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의 사람인데, 이런 북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과연 있는가?

두번째는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남북 문제를 포함해서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에는 북한 시스템의 실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데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스템의 변화가 없는 한은 어떤 형태이든 대북 관계를 포함해서 북한 문제의 획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중요한 문제는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민족과 우리가 사용하는 민족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민족과 자유주의국가에서 얘기하는 민족의 개념은 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맞추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대북 문제가 발전적으로 풀려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문제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과 이것이 냉전적 발상이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전략적으로 대북 문제를 어떻게 불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이런 인식이 정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대북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손 지사께 여쭙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 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어떤지, 앞으로 생각하는 거대한 평화경영 구상이 이러한 인식 바탕에서 나왔는지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손학규 지사) 우선 장명봉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정으로서의 통일 접근 방법에서 이 정부 내지는 6.15 공동선언의 취지와 제가 말씀드리 는 평화경영정책과 공유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남북연합이다 국가 연합이다 라고 하는 틀에 자꾸 끼어 넣으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상당히 이데올로기적 내지는 정치적인 틀 속에서 남북 관계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의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상의 통일은 정말로 실사구시적인 접근이 되어야지 자꾸 틀에다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틀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 민족공조나 한미공조나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편가르기에서, 더 나아가서 기초로서 개념적인 편가르기까지 자꾸 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거꾸로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한미 관계가 원활하게 진전되고 남북 관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개성공단 같은 사업들도 훨씬 더 빠르게 더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한 접근 자세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자꾸 틀에 얽매어서는 안됩니다. 그 동안에 남북 연합이다 한민족 공동체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개념이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정했느냐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개념 규정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럴수록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우리가 어떻게 매니저 할 것인가를 아주 유연하게, 출입이 자유롭게 우리 스스로의 자세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이 바로 실제로 남북 관계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됩니다.

김인호 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틀과 사고를, 그 사고의 틀 속에 자꾸 얽매임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해치고 그런 게 직접 남북의 경제협력이나 북핵 문제 해결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김 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고 물어시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300 달러가 됐건 1,000 달러가 됐건, 그 다음에 북한의 시스템인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해

준다고 한들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철학이고 비전이기도 할텐데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저희가 민주주의 발달사를 자본주의 내지는 경제 발전과 연관해서 보면 경제 발전이 결국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인권 신장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1960~70년대를 감옥 가고 도망 다니고 수배 당하면서 그때 민주주의가,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반 독재 투쟁을 하고 인권 운동을 하는 데 왜 민주주의가 오지 않는가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1980년대 중반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넥타이 부대들이 시청 앞을 덮음으로써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중산층이 튼튼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북한의 개혁·개방이 중국의 덩소평과 같은 개혁적인 지도자의 출현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혁·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달중 서울대학교 교수) 손 지사님께 두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우선 평화·번영 정책과 평화경영정책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단견이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평화·번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통일 정책의 알맹이가 뭐냐 비전 있는 햇볕정책을 들고 나와서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데 평화·번영정책의 알맹이가 무엇인가? 그게 현재 이 정부의 정책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지요. 북한에서는 아마 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표현은 멋있는데 평화·번영을 하기 위한 알맹이가 있어야 하는데, 평화경영정책을 보니까 앞으로 대선 주자로 나서시면서 씨먹기에 잘 먹혀 들어갈까 해서 여쭙어 보는데 평화경영, 이건 좋은 데 북한의 강성대국과 맞먹는 대응적인 것, 옛날 일명 국방, 혹은 건설 그런 걸 조금 바꿔 놓은 진일보한 형태인 것 같은데, 뭔가 와 닿는 평화경영을 하기 위한 어떤 정책, 여기에 정준명 사장님이 계시지만 일본에는 도요다 경영과 같은 것이 있는데 평화경영이 무엇인가를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민주화가 되면서도 우리나라 국가 기관들이 전부 향우회 기관으로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정보원도 국가기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기관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게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우리나라 방향 제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준명 삼성인력개발원 사장) 많은 학자 분들이 또는 중요한 포지션에서 중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페이지에 아시아 시대라는 관점에서 남북 문제를 바라보고 경기도정을 수행해 오셨다고 하였고 한반도 평화경영정책의 구상, 한미 동맹을 중시하신 건 저로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얘기로 들렸습니다. 또한, 12페이지에서 중국의 성장은 양면성이 있다고 강조하시고 중국 경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 흔들릴 경우 국제적 차원의 대비 시스템을 갖출 연구가 필요하다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의 사견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1998년 이래 중국이 WTO 가입하고 APEC 총회도 하고, 그리고 2008년에는 북경 올림픽, 2010년에는 상해 만국박람회(EXPO)를 하게 됩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면서 국내의 국제화를 도모하면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너무나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주는 쇼크가 너무 짧은 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문화대혁명 이후 또 하나의 쇼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 두 가지만 놓고 보면 북한은 너무나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준다기보다 잘못 보여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한 북한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우리나라 화력의 70%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지사로서, 저는 지금은 지사를 하고 계시지만 앞날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에 중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에 대한 대비 시스템에 대해서 지사님의 미래를 포함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손학규 지사) 장달중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장 교수님은 항상 정곡을 찌르는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평화경영정책이 한마디로 알맹이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평화경영정책의 개념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화 번영 정책은 평화·번영정책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번영정책은 '평화 + 번영', 평화체제를 이룩하고 번영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경영정책은 남북의 평화체제를 어떻게 경영(manage)해 나갈 것인가를 통해서 남북간의 상생의 협력·발전을 모색하고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이룩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글로벌 경쟁(contest)에서 찾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햇볕 정책이나 평화·번영 정책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글로벌한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북간의 평화체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공조, 민족공조 차원으로만은 남북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더욱더 발전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평화경영을 통해서 소위 자유 민주주의의 시장 경제 기초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로 집어먹기 좋게 맛있는 접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과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향우회 기관 같이 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주주의 발전이 도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공통의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정준명 사장님께서서는 중국이 앞으로 흔들리는 데에 대한 대비는 무엇이나? 아시아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결국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 국가 첨단산업과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저력을 확대해서 우리의 위치를 더욱 더 튼튼히 하는 것 밖에 무슨 묘수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 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북아시아의 문제도 단순히 한국 대 중국, 한국 대 일본,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한·중·일의 관계를 우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특히 한미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해서 그 환경(context) 안에서 對中 관계를 적립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평화경영정책의 기본 틀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좋은 말씀 듣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혹시 기자님들이 기사가 될만한 얘기로 평화경영정책과 통일에 관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하튼간에 북핵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에 대해 손 지사님께서서는 앞으로 당근과 함께, 어느 때에 가서는 채찍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한 것으로 이해했는데 언제 채찍을 쓸 수 있겠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있었던 서해 교전 같은 상황이 되면 채찍을 쓰겠는지, 몇 년 전에 있었던 10명 이상의 간첩 침투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채찍을 쓰겠는지, 북한이 핵 물질을 유출하면 쓰겠는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쓰겠는지 아니면 핵과 관련하여 또 다른 제2의 북핵 선언 때에 쓰겠는지, 소위 말하는 레드라인(red-line)인데 손 지사님께서서는 어느 단계가 채찍을 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완영 유니코텍코리아 회장) 10년 동안 북한에 사업을 하면서 공장도 4개 지어 봤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가 왜 안 되는가, 그 외에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이 실제로 무엇인가, 또 북한과 우리와의 경제 협력을 바라보면서 실제 경제 교류인가 아니면 지원성인가? 우리 지도자나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인식의 변화를 모르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단적인 예가 저희는 헌법에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을 영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 148개 회원 국가의 하나의 국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교류 협력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10여 년간의 대북 사업 과정에서 서 경험했는데, 역시 정부간의 지원성이 많을 때는 기업인들의 역할이 어려워지고 안 될 수밖에 없으며, 당국간의 상당한 냉정 기간이 있을 때는 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손 지사님께서서는 개성공단과 마주하는 파주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협력의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것인데, 지금 개성공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적인 접근으로 봐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과연 이것도 북쪽이 바라보는 경제 협력에 있어서 지원성 정책인가? 그런데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경제 협력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상호 기업간의 거래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평양-경기미도 어떻게 보면 경제 협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지원성이라는 것이지요 결국은 경제 협력과 정치적인 협력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서 과연 경기도민이 또 경기도의 많은 기업들이 북한과 교류할 때 이 정의를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가는 결국은 성공의 모델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북쪽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잠재력과 개발 성과를 어떻게 발전시켜서 공동으로 활용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체계적인 접근을 한번쯤 해 본 후에 투자도 하고 가야지 기업자적인 입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경기도가 하실 때도 한번쯤 참고하셔야만 개성 공단이 잘 될 것입니다. 어제 대한상의 발표에서 나왔는데, 개성 공단의 기업들이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면서 만든 공단이 향후 성공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적인 경제 협력의 접근이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북쪽과 빨리 교류를 터서 활성화를 시켜주든지 경제적인 정책을 더 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학규 지사) 백 소장님 질문은 제가 답변드릴 재간이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채찍을 쓸 것인가? 그런데 어느 단계냐 어느 계기냐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문제는 공동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도 좀 더 큰 시각에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항상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미간의 동맹이나 협의체제 같은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완영 회장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 자신도 지금 벼농사 시범사업은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이고 지원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민간 부분의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그것을 더 진전시킨다면 남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제의한 개성공단과 연결하는 경제특구, 경제특구 이전에라도 제가 자유로 확장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도라산 CIQ에 가보면 트럭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물론 지금 파주 LG필립스 LCD 공장 개발이 되면서 물동량이 많아지기도 했지만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해서도 남쪽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기지 같은 곳도 파주 일원에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 결국은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반제품을 완제품화 한다든지 이런 분업 내지는 산업간의 연관 협조를 위한 그러한 시스템을 남쪽에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 차원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기업들의 교류 협력 사업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길정우 이사) 다음 포럼에서는 말씀 드린대로 경제인 또는 개각이 완료되고 나면 새로 들어서는 외교·통일·복지 분야와 관계되는 장관을 초빙하여, 그래서 저희들의 관심을 외교·안보에서 경제·경영·복지 분야로 넓히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강연의 제목 또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손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알맹이보다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고 우리의 한반도의 평화경영정책의 기본 철학이 뭔가라는 기본 철학을 말씀해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기본 철학은 이념적인 대립을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실사구시에 바탕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이른 시간의 포럼에 참석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리고 손 지사님의 앞으로 정치적인 장래에 큰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좋은 말씀 들려준 손학규 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HRI**

정리 및 교열

황동원 선임연구원 (dhwang@hri.co.kr) ☎ 02-3669-4181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HRI 경제 지표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0	2001	2002	2003	2004(P)	2005(P)	2006(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8.5	3.8	7.0	3.1	4.6	4.0	4.5
	최종소비지출 (%)	7.1	4.9	7.6	-0.3	0.2	-	3.6
	민간소비 (%)	8.4	4.9	7.9	-1.2	-0.5	3.2	3.5
	총고정자본형성 (%)	12.2	-0.2	6.6	4.0	1.9	-	3.1
	건설투자 (%)	-0.7	6.0	5.3	7.9	1.1	0.3	1.5
	설비투자 (%)	33.6	-9.0	7.5	-1.2	3.8	5.1	5.5
대 외 통 계 관 거 기 래 준	경상수지 (억 \$)	122	80	54	119	282	166	80
	무역수지 (억 \$)	118	93	103	150	294	235	120
	수출 (억 \$)	1,723	1,504	1,625	1,938	2,538	2,847	3,120
	증가율 (%)	(19.9)	(-12.7)	(8.0)	(19.3)	(31.0)	(12.2)	(9.6)
	수입 (억 \$)	1,605	1,411	1,521	1,788	2,245	2,612	3,000
	증가율 (%)	(34.0)	(-12.1)	(7.8)	(17.6)	(25.5)	(16.3)	(14.8)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3	4.1	2.7	3.6	3.6	2.7	3.2
	실업률 (%)	4.1	3.8	3.1	3.4	3.7	3.7	3.5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131	1,291	1,253	1,192	1,145	1,024	980
	국고채금리 (평균, %)	8.3	5.7	5.8	4.6	4.1	4.3	4.6

주: 2005년 국민 계정은 한은 속보치 기준이며, 최종소비지출 및 총고정자본형성은 미발표됨.